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¹⁾

이 장 호 (서울대)

I. 머리말

‘남북통일’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통일이나 경제적 교류의 방안에만 편중되어 왔다. 특히 정치적 논의는 다분히 전략적이거나 대결적 구도에서 출발된 ‘하나(einheit)로의 지향’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통일’이 분명 분단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아닐진대, 단순히 정치·경제적 체제에서의 단일화만을 지향한다는 데에 이러한 논의의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정치적 단일 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통합의 노력이 없는 정치적 경제적 힘에 의한 체제 통일은 총체적 사회혼란과 심리적 분열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그 가치정향, 수행주체, 그리고 접근방법등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적 통일 방안이나 경제적 교류 방안과는 성격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남북 사회·문화적 통합의 가치정향은 민족 구성원 대다수의 이익을 위한 ‘민족 생활 공동체’의 정립이며, 그 통합의 수행 주체는 남북한 주민 전체, 즉 보수적 일부 기득권층이 아닌 변화를 수용하는 시민대중이며, 그 통합의 접근 방법은 의식 및 태도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정적 작업”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 문화적 통합의 초점은 통치체제의 통합보다 호혜적 생활 무대의 형성을 위한 것이고, 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정치역학 관계의 함수 및 그 대응력만이 아닌 주로 민족 주체적인 자율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뿌리 작업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 또는 논리(민족 공동체를 위한, 주체적 에너지에 의한 뿌리와 과정의 작업)에서 ‘통일’을 향한 남북 공동체적 통합의 사회 문화적 장애요인들에 관한 고찰을 우선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접근 불가능한 북한 자료에 입각

1) 본고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의 장애요인들” 주제의 학술세미나(1992. 11. 4)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정리한 것임.

한 논의는 물론, 심리과학에서 필수적인 실험·조사방법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적 연구보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장차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하나의 작업 가설 또는 심리·사회학적 접근의 (부분적)기초자료 제공에 의의를 두고져 했다.

II. 남북관계에 대한 관점: 통합인가, 통일인가?

현재로서는 국내 정치력에 의한 남북 사회체계의 연합 및 통일은 극히 힘들거나 가까운 장래에는 거의 무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선물'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통독의 경우와 우리의 사정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한반도에서는 6.25의 적대적 감정의 치유가 안된 채 거의 반세기 동안 남북간의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의 분단이 알타회담을 전후한 미·소의 흥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의 상황이 분단의 원인무효조치를 위한 정치력을 결코 발휘해 줄 리가 없다. 지금의 주변 정세를 보면, 미국은 지구 상에서 유일의 초강국이라는 측면에서 자국과 연결된 한국의 안보체제를 중시하고 있고, 일본과 러시아는 남북한 대등외교를, 그리고 중국은 남북한 관계에서 정경분리의 정책을 취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한의 사회·문화 구조 뿐만 아니라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등이 극도로 이질화되어 있으며, 서로 대립적인 형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과 대립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 덕분에 예상 밖으로 빨리 통일을 하게 된 독일의 경우에도, 1972년 12월 1의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후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17년 동안의 상호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통독 후유증'을 앓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대립적 사회구조와 이질적 생활방식 및 앞에서 말한 오늘의 주변 국제정세를 직시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식 적화통일도, 서독의 편입방식('흡수'보다 '편입'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임)통일도 다같이 성사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설사 온갖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분명 세계 최대의 부채국이 되고 말 부담을 무릅쓰고 남쪽체계에 의한 '편입식 통일'을 결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대립적 사회구조와 이질적 생활방식의 인위적 통합일 뿐이지, 진정한 통일은 아닌 것이다. 요컨대, 전통적 개념의 '통일'은 이상이고 소망에 불과하며, 현실적인 과제는 남북한 민족 공동체로서의 생활공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된다. 이른바, "동질성의 회복"은 지극히 당위적인 명제인것 같으나, 실제로는 앞으로 반세기 안에는

결코 성사되기 힘든,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포괄적이 아닌, 점진주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것이고”, 심지어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이라는 비판이 있을지라도, 현실에 바탕을 둔 비교적 합리적인 접근방법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북측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연합형 통일방식이기 때문에 남측 방안의 과도기적 국가연합체제의 설정부분에서는 서로 상통될 수도 있다고 본다. 요컨대, 정치·경제적 단일체제에 의한 물리적·물량적 ‘통일’보다는 민족공동체로서의 생활공간의 형성이라는 사회·심리적 ‘통합’을 더욱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질적인 이념(또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지닌 동포들끼리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제도적 통합 후에 사회적·심리적 통합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반세기 동안의 대립적 이질성 때문에 ‘정치제도적 통합 자체를 희생시킬지도 모르는 사회·문화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분단상태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동질화된 사회로서의 통일은 다음 세대의 과제가 될 지는 몰라도, 우리 세대의 과제는 이질성의 수용을 통한 연대적 삶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Ⅲ. 장애 요인 (1) - 6.25와 ‘적색 혐오증’

남북화해나 민족공동체로서의 남북통합에 있어서의 사회·심리적 장애요인중 아마도 첫번째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6.25의 상처와 이로 인한 남한 주민과 38선을 넘어온 이북 5도민의 의식에 잠재된 ‘적색 혐오증’일 것이다. 6.25로 인해 가족과 사별하거나 생활터전을 송두리 채 파괴당함으로써 입은 심리적 충격은 4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해방이 된 지 불과 몇 년만에, 비록 반도의 반쪽 공간에서나마 주권국가 시민으로서 겨우 첫걸음을 디디기 시작할 때에 입은 이 민족적 충격과 혼란은, 개인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trauma)에 비유될 수 있다. 아동기의 정서적 충격 경험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성장한 인간은 흔히 근거없는 불안과 긴장감에 사로 잡히기 쉽고 사고와 행동양식에 있어서 유연성과 자발성이 결핍되기 쉽다. 6.25후의 한국인들이 항상 ‘전쟁에 대한 공포’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달갑지 않아 하면서도 생존을 보장하는 모순된 정치적·경제적 안정 장치에 의존하는 가운데, 건전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민주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무기력했던 것은 이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충격과 뼈아픈 상처의 원인제공자로 간주되는 '공산주의 침략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증은 결과적으로 당연한 심리적 반응인 것이다. 공산 주의자들을 '빨갱이'로 칭하면서 일종의 '적색 혐오증'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혐오증은 반공 이외에 별다른 통치이념을 찾지 못했던 역대 정권에 의해서 최근까지 조장되어 온 셈이다. 우리는 적색 혐오증이 6.25동란과 그 이후의 일련의 충돌 사건들에서 형성될 수 밖에 없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심리적 반응이 과도하게 일반화되어 있거나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권에 속한 사람들의 실체에 대한 인식과 접촉에 있어서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무릇 무슨 무슨 '증'으로 규정될 수 있는 모든 심리적 반응 경향이 그러하듯이, '적색 혐오증'도 이성적·합리적 판단과 올바른 대처행동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일종의 정서적 복합(complex)인 것이다.

6.25는 2차 대전 후 소련의 원폭보유 및 중공정권의 대륙석권 등을 포함하는 당시 공산권의 팽창세와 이를 포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던 일종의 '대리 전쟁'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정권의 위정자들이 각자의 기득권을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에서 영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패권자로 등장하려던 양대세력에 부화뇌동한 셈이라고 치부해도 될 것이다. 당시의 위정자들로서는 '위대한 후원자들'의 암묵적 각본에 따라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지도 모른다.

여하튼 이제는 이 비극적인 6.25의 체험과 그 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적대적 사건들의 배경과 그것들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결과적 의미를 올바르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해,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수용이 6.25의 상처와 그로 인한 역기능적 정서를 치유하는 길일 것이다. 즉 6.25와 그 이후의 적대적 경험은 남북 공동의 '부채'로 삼아야 하며, 이를 무작정 잊으려하거나 덮어 버리는 것 또는 이에 집착하여 반복적으로 떠올리는것은 그 성격에 있어 또다른 심리적 괴리현상을 남게 하는 것이다. 6.25가 「분단의 해소는 전쟁으로만 가능하다」는 당시의 분위기와 판단에서 촉발되었던 것이라면, 지금껏 생존해 있는 전쟁 수행의 당시 책임자들이 그 과오를 시인하고 서로 용서하는 상징적 절차를 거친다면, 아마도 전쟁의 아픔과 분단으로 인한 시련의 승화과정이 눈에 띄게 촉진될 지도 모른다.

IV 장애요인 (2) - 변화에 대한 무관심 또는 저항

남북통합(남북 민족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 또는 심리적 저항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이 무관심과 저항은 분명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주요한 문화·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무관심과 잠재적 저항은 첫째, 명분 또는 개념상으로는 찬성하나 실현과정은 힘들 것이라는 '필요성과 실현성에 대한 상충적 '양가감정(兩家感情)'과 둘째, 언젠가 변화 될 것이나 관심이 없다는 식의 '반 자아몰입(反自我沒入)으로 그 성격이 집약 될 수 있다. 이 상충적 양가감정과 반 자아몰입적 심리현상의 예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읽을 수 있다.

- (1) · “(남북통합은)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 “경제적으로는 남쪽 체제로의 편입방식으로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은 함께 망하는 길이다.”
 - “되면 좋겠으나, 어려울 것이다.”
 - “김일성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리고 남쪽의 반공교육이 존재하는 한 어려울 것이다.”
 - “이데올로기, 가치관의 이질성과 강대국의 방해로 힘들 것이다.”
 - “위정자들의 통일 의지와 통일교육이 미비하다.”
- (2) · “통일이 되든 안되든 나는 상관 없다.”
 - “통일은 정치가들의 책임이고 우리로서는 할 일이 없다.”
 - “통일이 되어도 경제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득이 될 지 모르나, 나에겐 득이 될 것이 없다.”
 - “지금에야 생활이 겨우 안정되었는데 앞으로의 사회적 변동은 원치 않는다.” 등

이러한 상충적 양가감정과 반 자아몰입적 현상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접근 회피의 갈등'과 '학습된 무력감'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심리적 현상이다. 즉 '통일'이라는 목표는 분단이전으로의 회복 또는 민족적 화합이라는 면에서 지향하는 바람직한 목표인 동시에, 이질성의 충돌 또는 비평상적 과제 수행에 따르는 긴장(부담)이 예상 되기 때문에 회피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분단과정과 그후의 반세기 동안, 민족 스스로의 자기통제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통제감을 상당히 발휘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무기력한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민족적 생활공동체로서의 남북통합」에 관한 한, 보다 의롭고 만족스러운 나중의 생활상태보다는, 미흡하고 갈등적인 현재의 생활상태에 안주하고 있는 셈이며, 국민 전체적으로는 오랫동안의 대립적 냉전풍토로 인해 자발적·창조적 에너지의 창출능력이 거의 황폐화되어 있는 셈이다.

이렇게 접근-회피 갈등의 입장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의 진정한 과제와 주제로부터 이탈하여 피상적 “화제”에 집착하기 마련이며, 심정적 의사소통보다는 개념적 의사소통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저항 또는 교착상태의 심리는, 지금껏 지니고 살아 온 방어기계에 전향적으로 직면하게 된, 성격 변화 과정에서 하나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단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저항 및 갈등 현상은 전향적인 변화작업을 위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 방어기계의 파괴 및 생산적인 재구성작업이 없는 한 진정한 인격변화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철학에 변증법이 있고 학문발전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듯이, 정치·사회적 발전 역시 기존 체제의 구조적 재구성을 위한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치와 같다고 하겠다.

V. 장애요인 (3) - 보수적 권위주의 문화

권위주의나 보수주의적 풍토 역시 새로운 문화양식이나 민주적 생활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보수주의적 권위주의는 왕조시대 이래의 동양적 전제주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변의 생활문제 속에는 파행적 권위주의에 오염된 보수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 진보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보수주의는 ‘홍익인간’의 사상과 민주적 시민의식의 발현을 포용하고 있을 때에만 유용한 가치이념으로 수용될 것이다. 즉, 특정 기득권층의 이익을 유지, 확대하는 데만 기여하는 보수주의는 진정한 보수주의가 아니며, 기껏해야 ‘후진적’ 보수주의로 치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권위주의에 편향된 보수주의는 자칫하면 독재정권, 집단 이기주의, 지역 패권주의를 조장하기 쉬운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산업현장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창조적 작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마련이다. 권위주의적 독재자의 행동과 통치방법에 관해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일찍부터 기술된 바 있듯이, 권위적 독재자가 사용하는 주요 수단들은 힘에 의한 억압, 위

협, 간섭행위, 그리고 테러인 것이다. 현대의 '대중형' 독재자들은 이 밖에도 위장, 부패와 사회적 보상들의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리고 언론과 교육체계를 통해 동조적인 시민을 양산한 다음, 그들에게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는 수법을 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권위주의적 성격의 소유자는 개방적이기 보다는 폐쇄적이거나 인종주의적 편견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타협이나 중용을 취하기 보다는 때로는 극단주의적 편견에 집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요컨대, '권위주의적 보수풍토는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기본 명제에서 논의한다 하더라도,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와 보수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성과 경쟁성을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은 다양성을 넘어 극히 이질화된 사회체제와 생활가치를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평등적 공동체 의식과 공생적 동반자 정신의 생활문화와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남북화합의 어떠한 노력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적 생활공동체로서의 올바른 남북통합은 바로 이 동반자 정신과 시민적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할 때에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의 노력도 가시적·잠재적 성과가 없는, 단순히 '북방정책에 따른 절차와 왕래들'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남북화해와 통합에서 필수적인 '과정적 작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정권차원에서의 '통일업적주의'의 낭비적 부작용만을 누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 1992년 10월 25일자 사설 「'통일업적주의'의 주름살」참조).

VI. 장애요인 (4) - 파행적 의식구조: 의존성, 분파의식, 그리고 자폐성

앞에서 말한 '적색 혐오증',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권위주의적 보수성 풍토는 우리의 의식구조에 자리잡고 있는 의존성-분파의식-자폐성과 연결되어 있다. 의존성-분파의식-자폐성은 역사적으로 볼때, 특히 조선조 이래 우리 민족의 낙후성과 분열상태를 초래하였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의존성 때문에 사대주의 사상이 있었고, 끝내는 나라를 외세의 강점에 내맡기는 비운을 겪었고, 분파의식 때문에 과거에는 항상 당파싸움으로 나라의 정치가 엉망이었으며, 지금은 영호남의 지역갈등 내지는 대결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폐쇄적인 경직성 때문에 국제감

각에 어둡고 민족 고유의 문화창조마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 의존성-분파의식-자폐성이 앞에서 말한 화해적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근본적인 심리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정치·사회적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잠재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존성만 하더라도 그렇다. 미·소가 반도를 강점했던 일본군을 격퇴했고, 또 그 양대국의 정치적 흥정의 결과로 분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북의 정권들이 그동안 얼마나 미·소의 정치적 냉전구조의 노예가 되어왔던가를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힘이 전혀 없어서 국제정치적 여건에 좌지우지되는 태도로 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일본과 중국이 미·소와 함께 반도정치에 다시 관여하고자 하는 지금의 실정에서, 우리자신의 문제에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냉철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의 의존적 심리는 수출이득의 60%이상을 일본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민족사회 발전에 커다란 함정을 스스로 파놓고 있는 셈이다. 세계 일류의 인쇄기술과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발명했다고 자랑하던 우리 민족의 주체적 기술개발의 저력이 무색하게 된지 오래인 것 같다.

Ⅶ. 장애 요인 극복의 기본 방향

‘통일의 철학’이 ‘희망, 화해 그리고 창조’이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1991년 8월, 제4회 한국철학자 연합대회 대회보 1 ‘변화하는 시대와 철학의 과제’ 참조), 남북통합의 문화심리적 테제는 ‘주체의식, 호혜적 교류 그리고 개방적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접근에서는 주체성에서 출발하여, 대립적 거래가 아닌 호혜적 교류로, 그리고 자기 폐쇄적이 아닌 이질성에의 개방적 수용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손쉬운 업적주의가 아닌 힘든 ‘뿌리작업’을 착실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 뿌리작업에서는 기득권층의 정·경중심의 개혁만이 아니라 남북의 시민 대중에 의한 자율적 의식개혁의 ‘틀’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작업과정에서 과거보다는 현재를, 이념보다는 민족적 이익을, 개념보다는 심정을, 제공·지원의 형식보다는 상호작용적 교류를, 그리고 ‘그것, 그사람, 그네들’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발상의 전환과 그에 따른 태도 변화와 실천적 행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실천적 행동의 구심적 역할은 주로 정치·사회적 제도장치, 교육기구 및 언론기관이 담당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도적 장치,

교육풍토 및 언론매체가 어떤 면에서 반(反)남북 공동체 지향적이었는가를 냉철히 성찰하고 현재의 정치 제도적 장치 및 사회 풍토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단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